민주 "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속내는 하향평준화"

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토론회 개최
"정규직 임금 절반 받는 비정규직 현실 입법으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정규직에 정규직 임금을 맞춰서 끌어내리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다행히도 정부·여당이 최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향평준화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합리한 이유로 대우에 차별받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그게 사회 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며 "노동 의욕을 손상해서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즉 사회적 약자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 차별"이라며 "오히려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안정성이 확보 못 된 사람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통합의 길을 가야 하고 또 길게 보면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실제 전 세계를 보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규직보다 추가 임금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하다는 참혹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중심에 우리 입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개혁 방향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양대 노총과 민주당 정책위가 공동 주최하고, 우원식 의원 등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일본 오염수 검증 특위·청문회 이행하라"
민주 정책조정회의…박광온 "여야 합의 2주나 지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는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합의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이 지난 8일"이라며 "합의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84%가 넘는 분들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국회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은 국민의 요구대로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 합의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합법노조활동 보장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길 바란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5일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생산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조오섭, 기내 승객 금지 행위 처벌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22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내 승객의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항공기내 금지 행위로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항중인 항공기내 금지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항공기내 금지행위 발생건수는 2019년(536건)에 달했고, 2020년(133건), 2021년(85건) 감소했다가 2022년(264건), 2023년 4월기준(15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이용객이 급감했던 2020~2022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도 500여건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루평균 1.3건 이상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항공기내 금지행위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양향자, 26일 창당발기인대회
당명 '한국의 희망'…"국회의원 5명 넘게 관심" 파급력 촉각

화순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의 희망'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양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창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 신당의 파급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날 중앙당 창당 발기인 200여 명은 거의 청년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창당선언문 발표 및 대한민국 정치 진단, 대표발기인 소개 등으로 진행된다.

양향자 의원은 당명 '한국의 희망'에 대해 "미래, 청년, 혁신, 선진 등 희망적인 단어를 챗GPT에 넣었을 때 '희망'이 나온다"며 "여러 가지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진영논리에 빠진 한국정치를 희망으로 바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19일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대해 "대통령 제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희망이 아닌 절망만 주고 있다"며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보수당(보수 정당)이 아마추어라고 했고, 민주당은 보수당에 부패세력이라고 했는데, 20년간 아마추어와 부패세력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또 "양당 정치가 나아진 게 없고 공수만 바꿔 가면서 정치를 퇴행시키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청년, 혁신, 선진 등 희망적인 단어를 챗GPT에 넣었을 때 '희망'이 나온다"며 "여러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당명을 '한국의 희망'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신당에 관심을 갖는 현역 의원이 5명은 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오는 26일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을 본격 선언하면서 당의 지향점과 의원 합류 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승남, 생활화학제품 점자 표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2일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점자 등 표시기준을 마련해 점자나 QR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제품 겉면에 어린이 등 노출취약계층이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탓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23만 8319개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세탁세제나 샴푸 등 종류를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접촉이나 복용 등으로 발생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를 표시한 제품은 단 1개도 없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노출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한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